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	보 도 자 료	(배포)2017. 6. 29(목)
즉시 사용		
비고	* 모두말씀 별도배포 # 공동배포 : 공정거래위원회, 산업통상자원부, 국토교통부, 환경부, 식품의약품안전처	
담당	<총괄>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	과장 노혜원, 사무관 신용현 (044-200-2056, 2058)
	<리콜>국무조정실 정무업무평가실	팀장 김완수, 사무관 여현구 (044-200-2494, 2496)
	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	과장 이병건, 사무관 박지아 (044-200-4418, 4426)
	공정위 소비자정보지원팀	과장 정보름, 사무관 임수환 (044-200-4910, 4913)
	산업부 제품시장관리과	과장 오경희, 사무관 신상훈 (043-870-5420, 5422)
	국토부 자동차정책과	과장 조무영, 사무관 고성우 (044-201-3835, 3843)
	환경부 토양지하수과	과장 김지연, 사무관 이광용 (044-201-7170, 7188)
	환경부 교통환경과	과장 김영우, 사무관 이경빈 (044-201-6920, 6924)
	식약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	과장 장민수, 사무관 장인성 (043-719-1711, 1718)

리콜제도 소비자 친화적으로 획기적 개선!

- 모든 품목에 위해성 등급제 도입 -
- 리콜정보 쉽고, 빠르고, 정확하게 전달 -

▸ 화장품, 먹는샘물, 축산물 등 **모든 품목**에 **위해성 등급제 도입 추진**
▸ 리콜포탈인 「**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**」('행복드림')에 **리콜정보 연계 확대**
▸ **온라인 쇼핑몰과 중소유통매장으로 위해상품 실시간 차단시스템 확대적용**

□ **이낙연 국무총리**는 6월 29일(목) 오전, 정부서울청사에서 **제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**(약칭: '현안조정회의')**를 주재하였다.**

○ 이날 회의에서는 **「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개선방안」을 심의·확정**하고, 총파업 집회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함께 상황을 점검하였다.

* 참석자 : 국무총리(주재), 미래·문체·산업·복지·환경·국토부 장관, 공정위원장, 기재1·교육·법무·행자·고용부 차관, 식약처장 등 /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/ 국조실장, 국무1·2차장, 국무총리비서실장 등

□ 정부는 최근 자동차, 가구 등 제품 결함사고 증가로 **소비자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**하는 상황에서,

○ 제품 결함으로부터 **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**하기 위한 리콜 제도가 **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,**

○ 특히 소비자에게 리콜정보가 **잘 전달되지 않고 반품 절차 등이 불편하다**는 문제 인식에 따라, 이번 리콜제도 개선방안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였다.

□ 첫째, 그동안 **의약품과 식품 등**에만 적용하던 위해성 등급을 **화장품, 축산물, 먹는샘물** 등 **모든 품목에 확대**하기로 하였다.

○ 다만, **공산품**은 제품과 위해 유형이 다양한 점을 감안하여, 우선 **어린이 제품부터 위해성 등급을 분류**하고, 전기, 생활용품 등에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.

try of Trade,
try and Energy

□ 둘째,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와 행동요령 등 **중요한 리콜정보를 빠짐없이 제공**하고, 소비자가 쉽게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쉬운 **표준 양식과 용어를 사용**하기로 했다.

□ 셋째, **위해성이 중대한 경우 방송, 일간신문 등 소비자 전달 효과가 큰 매체**를 통해 **빨리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하고,**

○ **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**('행복드림', 공정위)에 **환경부**(먹는샘물 등), **국토부**(자동차) **관련 리콜 정보**를 추가로 **통합·연계**하여 소비자가 **한 곳에서 여러 부처의 리콜 정보**를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.

□ 넷째, 주로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운영되던 **「위해상품판매 차단시스템*」**을 **온라인 쇼핑몰 및 중소유통매장** 등으로 **확대·적용**하여 **리콜제품의 유통을 원천 차단**해 나가기로 하였다.

* 식품, 공산품 리콜제품의 유통을 조기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위해 상품 정보(바코드)를 입력하면 매장에서 해당상품 판매를 실시간으로 차단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7-06-29 10:24:54

○ 또한 소비자가 물품 반환을 할 수 있는 회수처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, **지역 대형 유통업체 등에서도 교환, 환불이 가능**하도록 해당 유통업체와 **리콜이행 협력 방안을 마련**할 계획이다.

□ 공정위는 이러한 개선방안을 담은 **'공통가이드라인'을 2017년 9월까지 마련**할 계획이며, **연내** 리콜 종합포탈인 **행복드림을 고도화** 할 계획이다.

○ 아울러, 산업부, 식약처,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**위해등급 도입 등을 위한 주요법령과 지침 개정**을 **내년 상반기까지 완료**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□ 한편, **이낙연 총리**는 내일(6.30) **민주노총과 비정규직 사업장 중심으로 하는 총파업 집회**가 시작이 되는 것에 대해,

○ "**일부**에서는 혼란이나 충돌, 또 다른 사람들은 위법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**걱정**도 하지만 **그런 [illegible] 기우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**"고 강조하였[illegible]

○ 또한 "**촛불혁명**으로 탄생한 **문재인 정부**에 대한 [illegible] **기대가 큰 것**처럼 **노동계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기대** 또한 **크고**

○ **정부**에 대한 **국민의 기대**가 높은 것처럼 **노동계**에 대한 **국민의 기대**도 높은 것을 **정부와 노동계가 깊게 유념**해 줄 것"을 당부하였다.

○ 또한, "정부는 **노동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, 노동계와 진정한 마음으로 대화**할 것이며,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결하려는 의지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**한 발짝 한 발짝씩 접점**을 찾아 나가야 한다"며,

○ 이번 집회로 인한 **국민들의 피해나 불편**이 **생기지 않도록** 관련 부처와 노동계 인사들에게 **배려를 당부**하였다.

붙임 : 「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개선방안」 1부